

GGM 존립 흔들는 노사 갈등... 지역경제도 '비상'

광주글로벌모터스

국내 최초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 '노사협정서' 무노조·파업 자제 명시 노조 결성...생산 확대 계획 등 좌초 노사민정, '파업 유보' 중재안 제시 노조 결정 따라 지속가능성 판가름

국내 최초 노사 상생 일자리 모델로 주목받았던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노사 갈등으로 존립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금속노조 산하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며 파업이 이어졌고, 생산 차질과 수출 중단 우려까지 커지며 지역사회 전반에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14일 GGM 등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2019년 광주시가 주도해 중앙정부, 현대자동차, 지역 노동계 및 시민사회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새로운 고용 모델이다. 낮은 임금 대신 복리후생과 공공 지원,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는 상생 구

조로 설계돼, 청년층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경제를 견인하겠다는 목표 아래 출범했다. 광주시와 현대차, 지역 투자자들이 공동으로 6000억원을 투자해 연간 10만 대 생산 규모의 공장을 세웠다.

'광주형 일자리' 1호 사업장인 GGM은 출범 당시 전국 최초의 노사민정 협력 모델로 주목받았다. 첫 생산 모델로 현대차의 경형 SUV '캐스퍼'를 위탁생산하며 본격 가동에 들어갔고, 올해는 역대 최대인 5만68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GGM은 설립 당시 노사민정이 체결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근거로, 누적 생산 35만대 전까지는 노조 대신 상생협의 회에서 근무환경과 조건을 협의·운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불가상승률 수준의 임금 인상만 가능하고 파업 자제 등도 명시했다. 현재 누적 생산량은 약 17만 대이며, 35만대 생산 목표 달성 시점은 2027년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해 4월 GGM에 민주노총 소속의 노조가 전격 결성되면서 '실질적 무노조 합'이 깨졌고, 수출 확대에 맞춰 추진해온 연간 10만대 생산체제와 2교대 전환 계획도 좌초됐다.

GGM 노조는 설립 이후 노동3권 보장과 임금 인상,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반면 사측은 GGM 출범 당시 체결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근거로, 일정 생산량(35만 대) 달성 전까지는 불가상승률 수준의 임금 인상만 가능하며 파업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선을 달리면서 결국 지난해 하반기부터 파업 사태로 이어졌고, GGM은 설립 이후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근 조정·중재안을 마련해 GGM 경영진과 노조 양측에 전달했다. 중재안은 상생·화합·미래지향의 3대 원칙을 기반으로 노사 간 양보와 타협을 유도하고

있으며, 경영진에게는 노조 사무실 제공, 조합비 공제, 근로시간 면제 확대, 신규모텔 도입 등 유연한 대응을 요구했다. 노조에는 35만대 생산 목표 달성 시까지 파업을 유보하고, 2교대 근무체제 도입에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

광주시와 GGM 경영진은 이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노조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하고 있다. 노조는 조정안에 포함된 '파업 유보'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노조의 최종 결정에 따라 GGM의 향후 경영 방향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지속 가능성도 판가름날 전망이다.

지역 경제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GGM 노조는 중재안을 수용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며 "노사

상생이라는 설립 정신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 속에서 GGM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수출 전진기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은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업부·국토부·환경부 산하 시험인증 기관을 모두 갖춘 도시"라며 "GGM노사 상생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는다면, 광주는 미래차 전환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GM의 최대 주주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을 중심으로 현대차, 광주은행 등 주주들은 15일 오후 진흥원에서 주주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GGM 노사는 이번 주 2차 실무협의회를 열고 후속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전남 국립의대 내년 개교 무산... 2027년 목표

정부, 의대 정원 3058명 동결 최우선 대선공약 반영에 총력

의정 갈등 장기화와 정부의 의대 정원 원점 회귀로 전남 국립의과대학의 내년 신설이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전남도는 새 정부 출범 후 202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전략수정에 나섰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4일 대선 불출마 선언 후 개최한 첫 기자회견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과 관련해 "이주호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에서 현재 상황에서는 2026학년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 및 정원 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정부의 의대 정원 3058명 동결 방침에 대한 서운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을 통해 내년 개교를 목표로 의대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정부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를 전제로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답보 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오는 5월 중 전형계획을 통한 신입생 확정 발표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입생 배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의대 신설 예비인증 또한 최소 1년 이상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2027학년도를 목표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속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를 위해 김 지사는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최우선 대선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날 중 목포대·순천대, 의료계와 함께 '의대설립 공동준비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의료계를 설득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대선 D-50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50일 앞둔 14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1층에서 직원들이 전광판에 대선 D-50일을 띄우고 기부행위 금지 등의 배너를 설치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마포구 중부 변전소를 모티브로 제작한 가상 이미지입니다.

“변전소로 나들이 오세요.”

“우리, 벚꽃 보러 가요.”

“날씨도 좋은데, 산책 다녀올까.”

우리 가족의 단골 나들이 장소는 도서관, 산책로, 놀이터 등 복합문화시설로 가득한, 우리 동네 변전소입니다.



놀이터와 도서관, 산책로와 체육시설 등, 가족의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을 주민친화형 변전소를 기대해 주세요.